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개선방안을 위한 탐색적 연구

-PERC, PRS, WEF의 부패지수 자료를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 in Korea : Focused on the Original References of PERC, PRS, and WEF

윤 은 기(Yun Eun Gee)^{***} · 이 정 주(Lee, Chung-joo)^{****}

ABSTRACT

Transparency International(TI) has determined the ranking of countries based on the original references of thirteen organizations in terms of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 in 2013. The original references provided by BF(SGI), BF(BTI), TI, WJP, WEF, EIU, GI, IMD, PERC, and PRS are used to measure the level of CPI for Korea in 2013. The three organizations including PERC(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Asian Intelligence), PRS(Political Risk Services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and WEF(World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 have analyzed that the assessment in terms of the standard of integrity in Korea is generally regarded as the high level of corruption. By the analysis of original references provided by three organizations, the strategy to improve a high corruption index can, as a matter of fact, be provided by the role and function of intensive, selective, and strategic administration control. Consequently, the strategy to strength the internal and institutional administration control will essentially be necessary to improve the level of CPI in Korea.

Key Words: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 PERC, PRS, WEF, Administration Control

I. 서론

국제 투명성 기구는 13개 자료들에 근거해서 공공, 민간, 정치 분야들의 종합적인 부패의 정도, 빈도, 영역들의 측정을 통해 부패인식도(CPI)에 대한 국가들의 순위를 평가하고 있다. CPI의 측정자료인 13개 자료들은 AFDB, BF(SGI), BF(BTI), FH, TI, WB, WJP, WEF, EIU, GI, IMD, PERC, PRS이 포함되는데 CPI의 순위와 각 자료들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을 측정하는 CPI 원천자료로는 BF(SGI)(57점), BF(BTI)(66점), TI(66점), WJP(67점), WEF(48점), EIU(54점), GI(52점),

* 이 논문은 2013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2013년 감사원 연구용역 “부패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의 일부를 발췌하여 논문으로 발전시켰음.

***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대 겸임교수

IMD(55점), PERC(47점), PRS(ICRC)(50점) 등이 포함되는데, 2012년 부패 인식지수(CPI)의 측정을 위한 각 데이터 자료는 공공 부문의 부패인식의 정량화, 적정성 있는 부패 지수 평가를 통한 신뢰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타당성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12년도 CPI는 다른 독립적인 기관들이 2년 이내 수집된 부패인식 데이터를 사용하여 측정되었고, 0은 최고의 부패인식도와 100은 최저의 부패인식도로 평가되었다. 이 분석 과정은 국제투명성기구와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포괄적인 검토와 협의과정을 거쳐 개발되었고, 2012 부패지수는 전 세계 나라들의 공공부문에서의 부패정도의 정량화를 통해 순위를 평가하였다. 부패지수의 공표는 부패문제의 인식을 높이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고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전략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의 CPI 측정의 경우에 국제 투명성 기구는 13개 자료에서 10개의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10개 기관 중에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자료들은 정치·경제 리스크 컨설팅사(PERC-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Asian Intelligence), 정치위기분석기관의 국제국가위험지수(PRS-Political Risk Services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세계경쟁력보고서(WEF-World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로, 한국에 대한 평가에서 PERC는 47점, PRS는 50점, WEF는 48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요소들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 선택적, 전략적인 감시와 조사의 역할을 통해 CPI 지수의 개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CPI 측정의 경우에 10개 기관 중에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PERC, PRS, WEF의 3개 기관들의 자료의 분석과 함께 CPI의 부패 지수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은 법률과 제도를 통한 부패방지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지만 우리사회의 문화적·정치적인 측면의 조건과 환경의 변화가 수행되지 못함으로써 제도적 형식주의의 형태로 평가될 수 있다. 정부 주도의 반부패 정책은 처벌적 기능의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내의 주인-대리인 이론의 공직자의 도덕적 의무와 책무를 강조해야 될 것이다. 클릿가드(Klitgaard)의 이론에서 대리인이 고객에 대하여 독점권(Monopoly)과 재량권(Discretion)이 증가되고, 책임성(Accountability)이 감소할수록 부패는 증가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클릿가드(Robert Klitgaard)는 책임성 있는 기관의 증가, 벌칙의 증가, 대리인의 공익추구의 강조, 부패에 대한 인식의 증가 등을 통해 부패 감소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로즈 액커맨(Susan Rose-Ackerman)의 정치 경제학 관점의 연구에서, 부패와 뇌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효율성, 정치적 타락 행위, 비 공정한 시장질서, 저 성장의 현상 등의 부패비용을 논의하고 반부패정책으로, 규제 축소, 민영화, 공기기업개혁, 반부패법 제정과 집행 등의 부패방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Rose-Ackerman, 1997).

국제사회에서 부패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평가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로 부패정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에 대한 여론과 기관 조사결과들이다. 우리나라의 CPI 지수는 2013년에 100점 만점에서 55점으로 177개국의 평가 중에 46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1년도 43위, 2012년도 45위, 2013년도 46위로 CPI 평가분석 결과는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CPI 지수는 여러 기관들의 원천자료들¹⁾로부터의 분석으로부터 산정되는데, 한국에 대한 CPI를 측정하는 원천자료들의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부패 현상과 현황의 파악과 함께 CPI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정주·윤은기(2013) 연구는 국제적인 평가지수인 국가청렴도 지수의 원천자료를 통해 한국사회의 부패의 평가결과에 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는데,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WJP), Bertelsmann Foundation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BF, SGI), World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WEF), Bertelsmann Foundation Transformation index(BF, TI)에서 CPI 산정에 활용되는 자료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을 분석 하였다;¹⁾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1) Bertelsmann 재단의 지속가능 거버넌스 지표(Bertelsmann Foundation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BF-SGI)는 OECD 국가의 거버넌스와 정책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각 국가의 개혁에 대한 욕구와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측정방식으로는 국제기관으로부터의 수집한 양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측정된 다음 저명한 국가 전문가로부터의 질적인 평가를 통해 보완된다. 전문가가 “공직보유자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남용을 방지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Bertelsmann Foundation Transformation Index(BF-BTI)는 128개 국가를 대상으로 심층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상태지수(status index)와 경영지수(management index)와 같은 두 가지 지수를 발표한다. 한편 이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설문문항 중 부패와 관련하여 관련 전문가가 이를 평가한다. 직위를 남용한 공직자가 기소와 형사 처벌 가능성을 측정과 함께 부패방지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국제투명성 뇌물공여 서베이(Transparency International Bribe Payers Survey)는 전 세계 30개 국가에서 국내·외 기업 간부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 뇌물과 부패에 대한 인식을 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식이다. WJP는 기회와 평등이 넘치는 공동체의 진전을 위한 법치주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독립된 비영리조직으로 법치주의와 다학문적 협력의 상호보완적인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법치주의는 기회와 평등이 넘치는 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이고, 부패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설문은 주로 사적이익을 위해 공직자가 공직을 사용하는 지에 대한 정도를 묻는 것으로 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 평가한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isk Ratings:EIU)은 영국의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조사기관으로 전 세계 정책결정자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자문기관으로 140개 국가 이상의 금융 분야에 대한 위험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Global Insight Country Risk ratings 시스템은 1999년 이후 운영되고 있으며 200여개 국가에게 위험환경의 6개 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되고 있다. 6개의 요인은 정치적 위험, 경제적 위험, 법적 위험, 파세운영상의 위험, 보안위험, 위험인물 등이다. CPI 원천자료에 사용된 점수는 운영위험(operational risk)으로부터 주로 인용한다. 부패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은 사업허가(business permit), 호의적인 정책(favourable policy), 사업기획결정(planning decision)과 관련되는데, 기업경영과 관리의 환경과 여건을 전문가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MD(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의 세계경쟁력연감(WYC)은 뇌물과 부패문제를 포함하여 사회적·정치적·경제적인 풍토가 기업경쟁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측정한다. 국가경쟁력이라 함은 기업의 가치생산과 국민들의 번영을 유지 및 조성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의미한다 (이정주·윤은기, 2013).

Law Index(WJP)는 행정부, 사법부, 경찰 및 군 공직자에 비해 정치인의 공직남용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정경유착을 통한 권력형 부패의 높은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2) Bertelsmann Foundation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BF, SGI)는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남용을 방지하는 부패예방에 대해 일부 청렴메커니즘이 작동하나 공직자의 직위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3) World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WEF)는 공직자금 유용이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받는 뉴질랜드에 비해 1.86배나 공직자금유용이 많이 발생하며 뇌물수수의 경우도 1.49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4) Bertelsmann Foundation Transformation index(BF, TI)의 평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직위를 남용한 공직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가능성의 정도는 싱가포르, 대만, 우루과이에 비해 부패에 대한 사후 통제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정부의 성공적인 부패억제정도 또한 싱가포르와 대만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정주·윤은기, 2013).

“외부적 제도적 통제전략은 행정통제의 큰 효과로 인식되고, 국회, 사법부, 시민단체, 옴부즈만, 언론, 정당 등에 의한 행정통제”의 경우이다. “내부적 제도적 통제전략은 기관내의 평가조직에서 수행하는 통제방식으로 대통령, 국무조정실, 감사원, 상급기관, 부처의 감사부서, 행정정보 공개, 민정수석 등을 통한 행정통제”의 사례이다. “외부적 행태적 통제전략은 "행정 관료의 의식 및 행태의 근거에 있는 행정문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식 및 행태의 변화를 통한 행정통제”의 사례이다. “시민재창조의 과정으로, 행정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통한 공무원의 의식 및 행태를 통제”하는 것이다. “내부적 행태적 통제전략은 행정부 내부에서 "공직자의 의식 및 행태의 변화"를 통해 행정 통제를 기대하는 전략으로, 공직자 윤리강령과 내부 고발 제도가 이 유형”에 속한다. “특정 행정 행위에 대한 직접적 통제라기보다는 공직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가치관의 함양”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윤은기 2007). 통제 전략의 우선순위의 분석에서 장시간이 소요되는 의식변화를 통한 통제는 특정 행정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의식과 태도에 대한 통제라는 관점에서 문화적 통제보다는 제도적 통제가 효과적일 수 있다.

III. PERC, PRS, WEF

1. PERC(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Asian Intelligence 2012)

PERC는 2057명의 서베이에 근거해서 정치 지도자와 관료의 역할과 주요 국가 제도를 평가하였다. 부패가 전반적인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뇌물의 문제가 민간 부문에서의 보편화의 수준, 내부조직의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하였고, 부패현상에 따른 여러 가지 추세와 경향을 분석하고 있다.

첫째, 인도와 인도네시아 같이 가난한 나라이건 혹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나라이건 상관없이 사람들은 관용의식이 줄어들고 부패에 대해 더욱 비판이 적어지고 있다. 둘째, 사적인 영역에서, 계약 성사를 위해 뇌물을 지불하고, 경쟁적 이점을 획득하는 공정거래의 규율을 반하는 행위들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아시아에서 근무하는 상위 국외 거주 관료들은 부패로부터 직면하는 가장 큰 위협은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 의지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전반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추진하였고, 싱가포르의 정치인과 주요 기관들은 다른 나라들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 되었다. 싱가포르의 정부는 부패를 다루는데 있어서 실제적인 신뢰도를 유지하고 민간부문에서 뇌물 수수에 관한 문제가 다른 나라들 보다 덜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였고 각 나라들의 10년간 부패인식도는 다음과 같다.

<표1> 10년간 부패에 대한 인식의 변화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호 주	2.20	2.24	1.67	0.83	0.98	1.40	1.47	1.39	1.28	2.35
캄보디아	n.a.	n.a.	n.a.	9.10	8.50	8.10	8.30	9.27	6.33	7.84
중 국	7.48	7.68	7.58	6.29	7.98	7.30	6.70	7.93	7.00	7.79
홍 콩	3.60	3.50	3.13	1.87	1.80	1.74	1.75	1.10	2.64	3.77
인 도	8.90	8.63	6.76	6.67	7.25	6.50	8.23	8.67	8.75	8.95
인도네시아	9.25	9.10	8.16	8.03	7.98	7.69	9.07	9.25	8.50	8.83
일 본	3.00	3.46	3.01	2.10	2.25	2.63	2.63	1.90	1.90	2.35
마카오	n.a.	n.a.	4.78	5.18	3.30	3.75	5.71	4.68	2.85	4.23
말레이시아	7.33	6.80	6.13	6.25	6.37	7.00	6.05	5.70	5.59	5.38
미얀마	n.a.	n.a.	n.a.	n.a.	n.a.	n.a.	n.a.	n.a.	n.a.	8.00
필리핀	8.33	8.80	7.80	9.40	9.00	7.68	8.25	8.90	9.35	8.28
싱가폴	0.50	0.65	1.30	1.20	1.13	0.92	0.99	0.37	0.67	0.74
대한민국	6.67	6.50	5.44	6.30	5.65	4.97	4.88	5.90	6.90	6.98
타이완	6.10	6.15	5.91	6.23	6.55	5.85	5.62	5.65	5.45	5.36
태 국	7.80	7.20	7.64	8.03	8.00	6.76	7.33	7.55	6.57	6.83
미 국	2.45	2.33	2.83	2.28	1.83	2.71	1.89	1.39	2.59	3.82
베트남	8.71	8.65	7.91	7.54	7.75	7.40	7.13	8.30	7.75	8.13

* 0부터 10까지 점수범위, 0을 가진 점수가 가능한 최고 점수이고 10이 가장 부정적

1976년에 설립된 PERC는 아시아 각국에 상주 연구원을 두고 각 나라 정치·경제 이슈 분석 및 국가·기업 리스크 관리를 자문하는 업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외국 기업인

1000-2000명을 대상으로 현지 부패정도(가장 부패 10점-가장 청렴 0점)를 평가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해 발표해왔다. 외국 기업인들이 현지에서 정(政)·관(官)·재계(財界)와 접촉하기며 일상 속에서 체험하는 부패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올해 설문조사엔 각국 상공회의소의 외국인 회원 및 세미나 참석자를 중심으로 총 2057명이 대면 혹은 e-메일로 참여했다. 이들은 정치인, 관료, 사법 및 과세당국, 군대, 감사원 등의 부패를 0-10 점으로 평가하였는데, 설문에는 정부의 부패적결 의지와 부패를 대하는 태도, 기업의 뇌물문제, 기업 내부의 대응 수준까지 포함되었다. 종합평가는 총 19개 항목의 점수를 종합·산출한 부패점수로 이루어진다.

아시아의 부패에 PERC의 2013 보고서에 포함된 국가는 호주, 캄보디아,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마카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 등이다. 2011년 홍콩의 정치경제 위험 자문공사에서 발표한 <아시아 지역부패 지표>에 의하면 한국의 부패지수는 아시아 16개국 중 9위로 민간분야는 최하위인 16위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국제투명성기구, 2011). PERC가 아시아 각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아시아 17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부패 정도를 평가하는 설문조사 결과 대한민국이 '아시아 선진국(developed countries) 중 부패국가'로 조사됐다. <표2>에서 국가별 정치인 부패지수는 한국 7.45로 평가되었고 국가별 기업 부패점수는 한국 8.76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표3> 2013년 아시아 국가별 부패점수에서 대한민국은 6.98점을 기록하며 싱가포르 0.74점, 일본·호주 2.35점, 홍콩 3.77점, 미국 3.82점 등에 비해 최소 두배 에서 세배까지 더 부패했다고 분석 되었다.

<표2> 국가별 정치인 부패지수와 기업 부패점수

국가별 정치인 부패지수		국가별 기업 부패 점수	
싱가포르	0.76	싱가포르	2.13
일본	3.11	일본	3.12
미얀마	6.00	태국	6.25
태국	7.35	중국	6.45
한국	7.45	미얀마	7.00
필리핀	8.05	필리핀	8.05
중국	8.41	인도네시아	8.67
인도네시아	9.16	한국	8.76

<표3> 2013년 아시아 국가별 부패점수

싱가포르	0.74
일본	2.35
호주	2.35
홍콩	3.77
미국	3.82
마카오	4.23
대만	5.36
말레이시아	5.38
태국	6.83
한국	6.98
중국	7.79
캄보디아	7.84
미얀마	8.00
베트남	8.13
필리핀	8.28
인도네시아	8.83
인도	8.95

한국의 부패점수는 지난 2004년 6.67점을 기록했다가 2010년 4.88점으로 떨어져 청렴도를 약간 회복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3년에 6.98점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보다 부패 점수가 높은 곳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정도였다. 반면 싱가포르를 지난 10년 동안 부패 점수 0.37-1.30점을 기록하며 부동의 아시아 청렴국가 1위를 지켰다.

한국의 종합 점수는 6.98점으로 17개국 중에서 8등인데,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 저개발 국가를 제외하면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PERC는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들이 정부나 공무원들의 평가와 함께 민간 부문의 문제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부패의 점수가 8.76점으로 아시아에서 2위였다. 기업의 뇌물관행 등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보다 심하다는 의미로써, 한국보다 기업부패가 심각한 나라는 오로지 인도(9.17)밖에 없었다. 부패 적발시,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는가를 묻는 설문에서는 8.87점으로 캄보디아(8.98)만 제외하면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들의 부패에 대한 태도-관대함을 묻는 질문에선 3.98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부패에 대한 국민적 척결 의지는 강한데, 실제로 기업들의 관행과 사법 시스템은 이를 충족시키기엔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정치권과 관료부패 문제의 경우,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부패(7.74)가 중앙공무원(6.85)이나 지자체 의원(5.63)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개발허가(7.87)에서 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고, 군대(4.98), 세무(5.35), 복지·환경당국(5.13)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PERC는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 한국기업이 활발히 진출하면서 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타국기업과 비교측정에서 한국의 부패문화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2. PRS(Political Risk Services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PRS의 국제국가위험지수(ICRG)는 정치 위험 지수 100점, 금융 위험 지수 50점, 경제 위험 지수 50점에서 세 가지 지표의 합에서 2로 나누어 측정된다. 0에서 100까지의 복합 점수에서, 다음 매우 높은 위험(0-49.9 점)과 매우 낮은 위험(80-100 점)의 범주로 구분되는데, 0점으로 갈수록 높은 위험 지수로 평가된다. 1980년에 설립된 PRS는 금융, 경제, 정치적 위험을 예측하는 국제 보고서를 발간한다. PRS의 분석은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자사의 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국제국가위험지수(ICRG)는 금융, 경제, 정치적 위험에서 현재의 사업과 투자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ICRG는 정치 위험, 금융 위험, 경제 위험은 위험의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되고, 정치, 금융, 경제 위험 요소들의 수집된 데이터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 금융 및 경제 위험 평가는 오직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 하지만 정치 위험 평가는 이용 가능한 정보의 주관적인 분석들을 포함한다. ICRG는 정치, 경제, 금융 위험의 다양한 위험 범주를 측정하는데 위험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가 종합 위험 지수를 제공한다.

첫째로, 정치적 위험 평가에서 0.0-49.9%는 매우 높은 위험, 50.0-59.9%는 높은 위험, 60.0-69.9%는 중간 위험, 70.0-79.9%는 낮은 위험, 80.0% 이상은 매우 낮은 위험으로 분류 되고 있다. 정치 위험 평가는 정치적·사회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12개의 하위변수로 구성되는데, 좋지 않은 정치적 위험 평가는 상대적으로 나은 금융적·경제적 위험 평가에 의해 보정될 수 있다. 12개의 정치 위험 구성 요소는 총 합계가 100점 만점으로 정부안정성 12점, 사회 경제적 조건 12점, 투자 프로필 12점, 내부 갈등 12점, 외부 충돌 12점, 부패 6점, 정치 군사 6점, 종교적인 긴장 6점, 법과 질서 6점, 민족 긴장 6점, 민주적 책임 6점, 관료의 질 4점등이 포함된다²⁾.

2) 정부 안정성(12점)의 구성요소들은 정부 효율, 입법 강도, 지지도 등이 포함되고, 사회 경제적 조건(12점)은 실업, 소비자 신뢰, 가난과 투자 프로필(12점)은 계약 유지와 몰수, 이익 송환, 지불 지연 등의 구성요소가 포함된다. 내부 갈등(12 점)은 전쟁과 쿠데타 위험, 테러와 정치 폭력 등과 외부 충돌(12 점)은 전쟁, 국경 간 충돌, 외국의 압력 등이 구성요소로 포함된다. 다른 정치 위험 구성 요소에서, 부패(6점)는 경제 및 금융 환경의 왜곡과 함께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을 감소한다. 부패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특혜, 세금포탈, 뇌물, 공금횡령 등이 포함되는데, 이 부패 현상은 연고주의와 족벌주의의 형태로 정치와 비즈니스 사이의 밀접한 연고주의 관계로 국가 경제에 비효율적인 통제와 법과 질서의 붕괴와 함께 블랙 시장의 발전을 촉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 군사(6점)요소로 장기적인 군부 통치는 독재적인 시스템을 공고화 하고, 민주적 책임의 감소와 함께 정부 정책의 왜곡을 야기 시킬 수 있고, 장기적인 군사 정권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종교적인 긴장(6점)요소로 종교 갈등은

둘째로, 경제 위험 평가에서 한 국가의 현재 경제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는 것으로, 50 % 미만의 경우, 해당 구성 요소가 매우 높은 위험으로 간주 될 수 있다. 포인트가 50-60 % 범위에 있는 경우는 높은 위험, 60-70 % 범위는 위험, 70-80 % 범위는 낮은 위험, 80-100% 범위를 매우 낮은 위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좋지 않은 경제 위험 평가는 상대적으로 나은 금융적·정치적 위험 평가에 의해 보정될 수 있다.

셋째로, 금융 위험 평가는 효율적인 금융거래와 공식적인 상업과 무역 채무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측정하는 시스템이다. 전체의 50 % 미만의 경우, 해당 구성 요소가 매우 높은 위험으로 간주 될 수 있다. 포인트가 50-60 % 범위는 매우 높은 위험, 60-70 % 범위는 위험, 70-80 %의 범위는 낮은 위험과 80-100% 범위는 매우 낮은 위험 이다. 좋지 않은 금융 위험 평가는 상대적으로 나은 경제적·정치적 위험 평가에 의해 보정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복합 위험 평가에서 금융 및 경제 위험 평가는 각각 25 %와 정치적 위험 평가 50 %로 산정되고, 다음 공식은 집계 정치, 금융 및 경제 위험을 포함하는 복합 위험 평가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CPFER (\text{국가 } X) = 0.5 (PR + FR + ER)$$

CPFER = 복합 정치, 금융 및 경제 위험 등급

PR = 총 정치 위험 지표 FR = 총 금융 리스크 지표 ER = 총 경제 위험 지표

가장 높은 등급(이론적으로 100)은 낮은 위험을 나타내며, 가장 낮은 등급은 (이론적으로 0) 높은 위험을 나타내는데, 00.0-49.9 점은 매우 높은 위험, 50.0-59.9 점은 위험, 60.0-69.9 점은 중간 위험, 70.0-79.9 점은 낮은 위험, 80.0-100 점은 매우 낮은 위험으로 평가 된다.

3. WEF(World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

세계 경쟁력 보고서는 신뢰받는 세계 경쟁력의 평가로 전문적 의견 조사에 의해 평가 되었다. 매년 140개가 넘는 국가를 평가하는 이 조사는 국가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는 세계 경쟁력 지수의 측정을 위해 네트워크 지수, 복합 무역환경지수, 여행 관광 경쟁력 지수, 금융 발전 지수, 성 격차 지수, 지역적인 조사를 포함한 지수들을 측정하고 있다. 이 조사 결과는 오랫동안 공공과 민간 조직에서 정치적인

종교 단체의 욕망이 지배하는 지배 구조, 종교의 자유 억압, 국가 전체에서 분리된 종교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종교 단체의 욕망과 관련된 위험이다. 법과 질서(6점)는 법률 시스템의 힘과 공정성에 대한 평가로 시장주의와 자유주의 체제의 작동에서 법치주의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민족 긴장(6점)의 구성 요소는 인종, 국적, 언어 부문에 기인 한 국가 내에서 긴장의 정도에 대한 평가인데, 반대 그룹이 관용과 타협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낮은 등급은 인종적 긴장이 높은 국가에 부여된다. 이외의 민주적 책임은 6점과 관료 자질은 4점으로 평가된다.

전략과 경제적인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들로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국제 투명성 기구는 이 조사 정보를 그들의 부패 인식 지수와 뇌물 공여 지수를 측정 하는데 사용하였다. 경제 협력 개발기구와 국제 통화 기구와 같은 기관들은 이 자료들을 참조하고 있다. 세계 경제 포럼은 연간 조사를 30년 넘게 연간조사들을 수행하였고, 올해의 조사는 2013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사업자들의 의견들을 조사하였고, 전체 13,638의 서베이 조사들을 통해 148개의 나라를 평가하였다.

이 조사에서의 대부분의 질문은 응답자들에게 1에서 7의 척도에서 응답을 요청하고, 1은 가장 나쁜 가능한 상황을 나타내고 7은 가장 좋은 가능한 상황을 나타낸다. 이 조사의 실행은 160개가 넘는 전 세계적인 파트너 기관의 협력 없이는 실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파트너 기관은 인정받는 조사 기관, 학문적인 기관, 사업 조직, 국가 경쟁력 위원회, 전문적인 단체들이 포함되었고 이 조사를 시행 하는 과정에서 파트너 기관들은 정확한 조사를 위한 자세한 샘플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 이 조사 샘플링 가이드라인은 샘플 규범에 의거해서 직접 조사와 온라인 조사 방법을 시행하였다.

1) 경쟁력의 12가지 부분

국가생산성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아래의 12가지 부분들은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 결국, 생산성의 수준은 경제에 투자를 통한 성장비율의 근본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경쟁력의 개념은 정적 및 동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데, 국가의 생산성은 소득의 수준을 결정하지만,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성장과정은 생산성과 경쟁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교육 및 훈련, 기술 진보, 거시 경제 안정성, 좋은 관리방법, 기업 세련미, 시장 효율성과 같은 다른 메커니즘에 관심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경쟁력과 성장에 중요한 매개 변수로 상호 배타적이지 않는 요소들로 평가되고 있다³⁾.

3) 경쟁력요소인 12개의 부분들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보완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강력한 혁신 역량(12번 부분)과 새로운 기술(9번 부분)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인력(4, 5번 부분)없이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다. 선진화된 국가와 개발도상국의 발전 단계의 차이가 상존하고 있다. 효과적인 개발 과정의 첫 단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공공 및 민간 기관(1번 부분), 잘 발달 된 인프라(2번 부분), 안정적인 거시 경제 환경(3번 부분), 인력기본 교육(4번 부분)등은 국가 경쟁력의 향상에 상호의존적이다. 더 효율적인 생산을 개발하기 시작해야 할 때 국가는 개발의 효율성 중심의 단계로 이동한다. 임금상승과 함께 이 시점에서 경쟁력을 점점 고등 교육 및 훈련(5번 부분), 효율적인 상품 시장(6번 부분), 유연한 노동 시장(7번 부분), 개발 금융 시장(8번 부분)의 이점을 활용하는 정부의 능력에 의해 발전이 결정된다. 기존 기술(9번 부분), 큰 국내 또는 외국 시장(10번 부분). 국가 혁신 주도 단계는 기업이 창의적인 독특한 제품의 생산과 공정한 경쟁 시장이 상존할 때 국가 경쟁력이 상승한다. 이 단계에서 기업은 가장 정교한 생산 공정(11번 부분)를 사용하여 창의적인 다양한 제품의 생산을 통해 혁신 단계(12번 부분)를 모색하게 된다. 국가마다 경쟁력 요소인 12 부분들에 대한 상대적

① 첫 번째 부분 : 기관

제도적 환경은 개인, 기업, 정부 사이에서 법률과 행정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건전하고 공정한 제도적 환경은 모든 경제 및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기관의 능력은 경쟁력과 성장력과 높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투자 결정과 생산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개발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장, 자유, 운영의 효율성을 향한 정부의 태도가 중요하다. 과도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과도한 규제, 부패, 공공계약의 부정, 투명성과 신뢰성의 부족, 사업 부문에 특정한 서비스 제공의 부족, 사법 제도의 정치적 의존성은 기업에게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부과하고 경제 발전의 과정을 저해한다. 또한 공공 재정의 적절한 관리는 국가적 사업 환경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회계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② 두 번째 부분 : 인프라

효율적인 인프라는 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요인으로서 경제의 효과적인 기능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잘 발달된 인프라는 국내시장을 통합하고 효율적인 시장거래를 촉진한다. 잘 발달된 교통과 통신 인프라 네트워크는 저개발 지역에서의 핵심 경제 활동 및 서비스로의 접근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인프라는 도로의 질, 철도, 항만, 공항, 전기, 통신 네트워크 등을 포함하는데, 광범위한 통신 네트워크는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경제 주체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관련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서 전반적인 경제의 효율성을 증가 시킬 수 있다.

③ 세 번째 부분 : 거시적 경제 환경

거시경제 환경의 안정성은 국가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위해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비록 거시경제의 안정성은 홀로 국가 생산성을 높일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것은 또한 유럽의 상황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본 바와 같이 거시경제의 혼란이 경제를 해치고 있다고 인식된다. 정부는 채무에 대한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할 경우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기업은 물가 상승률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없는데, 일부 유럽 국가들은 국제 금융 위기의 경우와 같이, 거시적 환경이 안정되지 않는 한 경제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없다.

④ 네 번째 부분 : 건강 및 초등 교육

인재 개발은 국가의 경쟁력과 생산성에 매우 중요하다. 낮은 노동 생산성의 근로자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고 생산성이 감소하게 된다. 시민들이 받는 기본교육

중요성은 차이가 있고, 각각의 상대적 중요성은 개발 국가의 특정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의 양과 질이 중요한데, 기본 교육은 개별 근로자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게다가, 정규 교육을 적게 받은 근로자는 간단한 수동 작업만을 수행할 수 있고 진보된 생산 과정과 기술에 적응시키기는 어렵고, 혁신의 제안이나 실행이 감소하게 된다.

⑤ 다섯 번째 부분 : 고등 교육 및 훈련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은 창조 경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오늘날의 세계화 경제는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변화하는 환경과 생산 시스템의 변화하는 요구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근로자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⑥ 여섯 번째 부분 : 상품 시장 효율성

국내외에서의 건강한 시장 경쟁은 시장의 효율성에 달려 있다. 따라서 시장이 요구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가장 효율적인 기업 생산성이 있는 기업이 번영하게 된다. 예를 들면 국가 경쟁력은 자유주의 시장 원칙에 왜곡과 제한에 대한 차별적인 규칙에 의해 방해 받는다. 최근의 경제 위기는 세계경제의 높은 수준의 상조의존성과 시장개방을 강조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조치는 그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장의 효율성은 소비자와 구매자들의 경향에 따른 소비자 지향적인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⑦ 일곱 번째 부분 : 노동 시장의 효율성

노동 시장의 효율성과 유연성은 노동자에게 경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다. 경직된 노동 시장은 사회적 불안의 촉발과 높은 청년 실업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효율적인 노동 시장은 능력 위주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 강한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⑧ 여덟 번째 부분 : 금융 시장 개발

금융 및 경제 위기는 금융 부문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조 하고 있다. 효율적인 금융 부문은 효율적인 사업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증가한다. 따라서 경제는 금융 부문의 대출, 증권 거래소의 역할, 벤처 캐피탈 및 기타 금융 상품의 기능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⑨ 아홉 번째 부분 : 기술 준비

기업이 경쟁하고 번영하는 요즘의 글로벌 세계에서, 기술은 점점 필수적이다. 기술 준비는 민첩성을 측정하고 효율성 향상을 위한 생산 공정의 기술 및 사용 혁신 능력을 강조 하며, 그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 통신 기술을 강조한다. 따라서 ICT 접근 및 사용은 국가의 전반적인 기술 준비로 지칭된다.

⑩ 열 번째 부분 : 시장 규모

시장의 크기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의 시대에 무역 개방은 긍정적인 성장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무역과 국가의 성장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상호작용의 분석이다.

⑪ 열 한번째 부분 : 비즈니스 고도화

비즈니스 고도화 전략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성에 효율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기업의 전략은 사업 고도화 전략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는 생산성 향상의 기본적인 요소가 고갈 되고, 개발의 고 차원 단계에 도달한 국가에 특히 중요하다. 특정 분야의 기업과 공급 업체는 제품 혁신을 위해 기업의 창조적 브랜딩과 마케팅을 통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⑫ 열 두번째 부분 : 혁신

혁신은 새로운 기술 및 비 기술적 지식 에서 나타날 수 있고, 경쟁력의 마지막 주제는 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기적으로 생활수준은 크게 기술 혁신에 의해 향상 되어 왔는데, 기술 혁신은 18세기 증기 엔진 발명, 전기의 발명,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을 경험하고 있다. 지식과 인성 기술을 통합하고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에 있어 혁신은 경제에 특히 중요하다. 개발도상국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더 높은 부가가치 활동을 향해 새로운 기술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창출 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 미래로 가기 위해 지적 재산권의 보호, 광범위한 연구 및 대학과 산업 간의 기술 개발과 같은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

2) 한국의 세계적 경쟁지수

중요한 한국의 세계적 경쟁지수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인 사회 제도에서는 재산권 55위, 지적 재산권의 보호 48위, 공적 자금의 전환 62위, 불평등한 납입과 뇌물 57위, 사법적 독립 78위, 정부 관료들의 편파 판결 79위, 정부 지출의 낭비 80위, 정부 통제의 부담 95위, 논쟁의 결정에서 합법적 조직의 효율 84위, 조직적 범죄 73위, 경찰 서비스의 신뢰도 47위, 회사의 도덕적 행동 79위, 통계와 보도 기준의 영향력 91위, 투자자를 보호하는 힘 41위로 평가 되었고, 특히, 정치인들에 대한 공적 신뢰 112위, 저항적 규정에서 합법적 조직의 효율 101위, 정부의 정책결정의 투명성 137위, 기업 이사회들의 효용성 130위, 소수 주주들의 이익의 보호 124위가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부분인 하부 구조에서는 하부구조의 전반적 질 23위, 도로의 질 15위, 철도 기반 조직의 질 8위, 항구 기반 조직의 질 21위, 항공 수송 기반 조직의 질 22위, 이용 가능한 비행기석 19위, 전력 공급의 질 39위, 휴대전화 사용 70위, 유선전화 라인 2위로

평가 되었다. 세 번째 거시경제학 부분에서는 정부의 전반적 부채 50위를 제외하고 정부 예산의 균형 18위, 국가적 저축의 총계 21위, 인플레이션의 연간 변화율 1위, 국가의 신용등급 22위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분석 되었다. 네 번째 건강과 초등교육 부분에서는 말라리아로 인한 경제적 타격 90위, 말라리아의 사례 86위, 결핵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 73위, 결핵의 사례 95위, 에이즈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타격 77위로 건강분야가 부정적으로 인식되었고, 에이즈의 유행 11위, 전염병에 의한 유아의 죽음 26위, 초등교육의 질 23위, 초등교육의 입학자 수 28위로 평가 되었다.

다섯 번째 고등교육과 훈련 부분에서는 교육 시스템의 질 64위, 수학과 과학 교육의 질 20위, 경영 교육의 질 56위, 학교에서 인터넷의 이용 13위, 연구와 양성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31위, 조직원 양성의 범위 51위로 평가 되었고, 여섯 번째 요점인 자산 시장의 효율 부분에서는 지역적 경쟁의 정도는 8위, 독점금지 정책의 유효성은 49위이지만 시장 우위의 범위는 118위와 투자 동기에서 과세의 영향은 104위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일곱 번째, 노동 시장의 능률성 부분에서는 노동자-고용주 관계의 협력이 132위, 임금 결정의 융통성이 61위, 고용과 해고의 관행이 108위, 불필요한 비용이 120위, 일에 대한 동기 부여에서 과세의 영향이 111위로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여덟 번째 부분인 재정 시장의 발전에서는 재정 서비스의 유용성이 92위를, 재정 서비스의 감당 가능한 비용은 69위를, 지역 주식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75위를 차지하였으며, 대출에의 접근의 용이성은 118위, 투자 자본 이용 가능성은 115위, 은행의 건전함이 113위, 증권 거래소의 규정이 94위로 부정적인 평가였지만, 법률적 권리 지수는 28위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아홉 번째 부분인 기술적 준비에서는, 최신 기술의 이용도가 27위, 견고한 수준의 기술 흡수가 21위, 외국인 직접 투자와 기술 이동이 84위, 개인의 인터넷 사용이 15위에 있으며, 고정된 광대역 인터넷 사용이 5위와 휴대폰 광대역 사용이 4위로 평가 되었다. 열 번째 부분인 시장규모에서는, 국내의 시장 규모 지수가 12위, 해외 시장 규모 지수가 5위, 국내 총 생산이 12위, 국내 총 생산에서 수출이 사용하는 비율이 37위로 평가되었고, 열 한번째인 사업고도화 부분에서는 지역 공급자들의 수가 24위, 지역 공급자들의 질이 30위, 집단 개발의 양상이 28위, 경쟁 우위의 특징이 16위, 생산과정의 고도화가 21위, 마케팅의 범위가 31위, 권한 위임에서의 의지는 54위로 평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열 두번째 부분인 혁신에서는 혁신의 수용력이 22위, 과학 연구 기관의 질이 24위, 연구 개발에 대한 회사의 지출이 20위, 연구 개발의 산학협력이 26위에 있으며, 첨단 기술 제품의 정부 조달이 31위, 과학자와 기술자의 가용성이 33위, PCT의 특허와 적용이 9위로 평가 되었다.

WEF의 국제경쟁력 지수는 크게 세 가지의 하위지수인 기본요건 하위지수(Basic requirements subindex), 효율성 강화 하위지수(Efficiency enhancers subindex), 혁신 및 정교화 요인하위지수(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factors subindex)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요건 하위지수로는 제도(Institutions), 사회시설기반(Infrastructure), 거시경제 환경(Macroeconomic environment), 건강과 초등교육(Health and primary education)으로, 효율성 강화 하위지수는 고등교육 및 훈련(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상품시장 효율성(Goods market efficiency), 노동시장효율성(Labor market efficiency), 금융시장발전(Financial market development), 과학기술준비(Technological readiness), 시장규모(Market size)로 구성되어 있으며, 혁신 및 정교화 요인하위지수는 기업정교화(Business sophistication), 혁신(Innov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CPI 점수산정에 활용되는 자료는 기본 요건하위지수 중 제도적 요인과 연관되는데 제도적 요인 중 공적자금의 유용(Diversion of public funds)과 비공식적인 추가 지불 및 뇌물수수(Irregular payments and bribes)가 활용되며 두 가지의 평균값이 CPI 점수산정에 이용된다 (이정주·윤은기, 2013).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 지수의 점수와 순위는 다음과 같다.

<표4>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in Korea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 지수)

	Rank (out of 148)	Score (1-7)
GCI 2013-2014	25	5.0
GCI 2012-2013 (out of 144)	19	5.1
GCI 2011-2012 (out of 142)	24	5.0
Basic requirements 기본요구 (20.0%)	20	5.6
Institutions 제도	74	3.8
Infrastructure 사회기반시설	11	5.8
Macroeconomic environment 거시경제 환경	9	6.3
Health and primary education 건강과 초등교육	18	6.4
Efficiency enhancers 효율성 강화 (50.0%)	23	4.9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고등교육 및 훈련	19	5.4
Goods market efficiency 상품시장 효율성	33	4.7
Labor market efficiency 노동시장 효율성	78	4.2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금융시장발전	81	3.9
Technological readiness 과학 기술 준비	22	5.6
Market size 시장 규모	12	5.6
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factors 혁신과 세련도 요인 (30.0%)	20	4.8
Business sophistication 사업 정교화	24	4.9
Innovation 혁신	17	4.8

종합적으로 CPI 평가를 위한 10개 기관들의 자료들 중에서 한국에 대해 가장 낮은 평가한 기관들은 PERC(47점), PRS(50점), WEF(47점) 등이 포함되었다. PERC는 ‘한국이 아시아 선진국 가운데 부패에 가장 취약하다’며 지적했고, PERC의 평가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부패의 점수가 8.76점으로 아시아에서 2위였다. 기업의 뇌물관행 등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보다 팽배하다는 뜻이다. 한국보다 기업부패가 심각한 나라는 오로지 인도(9.17)밖에 없었다. 부패 적발시,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는가를 묻는 설문에서는 8.87점으로 캄보디아(8.98)만 제외하면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PRS의 평가는 정치 위험, 금융 위험, 경제 위험의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하고, 정치 위험 지수 정치 위험 지수 100점, 금융 위험 지수 50점, 경제 위험 지수 50점의 가중치를 측정하는데 정치 위험 지수가 가중치가 가장 높는데 한국은 정치 위험 지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WEF의 평가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공적신뢰 112위,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 137위, 기업 협회의 효율성 130위, 소수 주주들의 이익의 보호 124위, 은행의 건전성 113위, 노동자-고용주 관계협력 132위로, 공적신뢰의 증가,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의 개선, 경영지배시스템 개선정책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사업에서의 가장 큰 문제요인으로는 금융접근성(16.5%), 비효율적인 관료제(16.1%), 정책불안정(15.2%)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전반적인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서 특히 노동시장의 효율성 78위, 금융시장발전 81위, 제도 74위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IV. CPI 지수 향상을 위한 행정통제 전략의 제안

CPI 평가를 위한 자료들 중에서 PERC(47점), PRS(50점), WEF(47점)의 낮은 평가를 받은 요소들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CPI 지수의 개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고, 제안적인 정책들은 일곱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윤은기, 2012).

첫째, 글로벌 경제의 확산으로 「반부패 운동의 국제화」가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면서, 국제 상거래에서 부패의 방지와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부패·윤리라운드 등이 출범하였다. 90년대 들어 신흥시장이 부상하면서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부패문제가 제기되었고 90년대 중반부터 협약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미주기구(OSA, 1996. 3) 반부패협약 체결, WTO(1996.1.) 정부조달의 투명성 협정(한국서명, 1997년 1월부터 이행), UN총회 (1996.12.) 반부패 결의, OECD(1997.12.17.) 국제거래상 외국공무원 뇌물제공방지 협정체결, UN 반부패협약 (2003.12.) 등의 협약들이 제정되었다.

뇌물은 직권을 이용하여 특혜를 받기위해 주는 부정한 금품을 의미한다. 뇌물은 도덕과 윤리의 범주 대신 보편적인 상식이나 관행으로 인식되어지고, 관료와 기업, 관료와 개인, 관료와 언론, 교육현장, 의료계 등의 영역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뇌물사건이 조사되었는데, 뇌물방지협약 이행수준에서 2009년과 2010년과 같이 소극적 이행국가로 분류되었다. 문제점들은 정보접근법의 제한성, 불충분한 법체계, 반부패기구의 비독립성, 공익제보자 보호의 미흡성 등이 지적되었다(국제투명성기구, 2011).

1997년 5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 구체적인 형사 처벌 규정을 담은 국제협약의 제정과 함께 권고안이 채택되었다. 국제적인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000년부터 격년제로 발표하는 지수인 우리나라의 뇌물공여 지수(Bribe Payers Index)는 뇌물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형편이다.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인 부패지수(CPI)와 다른 점은 부패지수가 뇌물을 받는 쪽인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초점을 두는 반면, 뇌물공여지수는 뇌물을 주는 기업의 부패행위에 주안점을 둔다는 점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세계 28개국 선도수출기업들의 해외에서 뇌물 공여 가능성 조사인 2011년 뇌물공여지수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7.9점의 점수를 얻어 28개국 중 13위를 차지하였고, 네덜란드(8.8), 스위스(8.8), 벨기에(8.7), 독일(8.6), 일본(8.6) 순으로 기업들은 해외에서 뇌물을 공여할 가능성이 가장 낮고, 러시아와 중국은 뇌물 공여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구분되었다. 2011년 홍콩의 정치경제 위험 자문공사(PERC)에서 발표한 <아시아 지역부패 지표>에 의하면 한국의 부패지수는 아시아 16개국 중 9위로 민간분야는 최하위인 16위로 평가받았다 (국제투명성기구, 2011). PERC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기업부패의 점수가 8.76점으로 아시아에서 2위였고 기업의 뇌물관행 등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보다 심하다는 뜻이다. 뇌물공여지수의 상승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가와 대외신인도의 상승을 통해 외국인투자 증가와 수출입 증가를 야기하여 국민소득 향상을 가져온다는 관점에서 뇌물방지법의 적극적인 이행을 통해 적극적 이행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둘째, PERC의 평가에서 부패 방지를 위해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는가를 묻는 설문에서는 8.87점으로 캄보디아(8.98)만 제외하면 낮은 평가를 받았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형법상의 뇌물죄의 기존의 부패방지 관련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실효성 있는 법으로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미국은 1962년에 다양한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들을 정리와 함께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의 금지에 큰 역할과 기능을 하였다. 기존의 부패방지 관련법들은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는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고위층 인사의 스폰서가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본인,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수행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활동의 금지를 포함한다.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수수 자체의 처벌"과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방지"하는 주요한 내용인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화가 조속히 필요하다.

셋째, WEF의 평가에서 기업 협회의 효율성 130위, 소수 주주들의 이익의 보호 124위, 은행의 건전성 113위로 경영지배시스템 개선정책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기업의 경영지배시스템 개선 정책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 가운데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이 겸직하고 있는데, 경영진에 대한 공정한 감시가 가능한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상장사는 2.5%인 18개사이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710개사 가운데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기업은 91.4%인 649개사였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2). 사외이사가 의장을 맡고 있는 18개사도 금융기관, 공기업,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곳이어서 의무적으로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한 경우이다. 세계 최대 주총안건 분석기관인 ISS(기관투자자주주서비스)에 따르면 미국 S&P1500 구성 종목 중 CEO와 이사회 의장

직을 분리한 기업은 46%이고, 그 중에 53%는 독립된 사외 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되었다(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2). 지배주주가 의사결정자인 CEO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에 독립적인 이사회 구조가 될 수 없고 경영감시자로서 기능을 담당할 수 없다.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의 직위가 분리되는 지배구조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는 공공기관의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 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를 통해 예비타당성 검사를 받도록 운영해왔다. 서울시의 경우, 서해벚길과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세운초록띠공원 조성 등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1973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지적되었고, 세빛둥둥섬과 지하철 9호선, 우면산터널 등은 민간사업자와 부당한 협약 체결로 1454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려대 산학협력단, 2012). 대규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제도의 강화가 요구되어 진다. 동남권 신공항, 동해안 고속도로 등 대선 정책 공약으로 제시된 각종 대형국책사업은 사전타당성검토를 거쳐 효율적인 정책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세금의 낭비와 재무건전성의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내실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발확률과 유죄선고를 받을 확률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부패비용은 적발될 확률×유죄선고 받을 확률×형벌로 정의 할 수 있다(Rose-Ackerman, 1978). 부패비용과 부패이익간의 비교를 통하여 부패이익이 부패비용보다 높을 때 부패유인이 발생하게 되는데(Klitgard, 1988), 부패유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패 적발확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반부패 정책이 내부 공익제보보다 보호제도로 평가될 수 있다.

지난해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2011.9.30-2012.3.31)간 국민권익위원회와 171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침해신고 건수는 총 4만 4,508건이었으며, 소비자이익과 관련한 분야의 공익침해신고가 3만 8,984건(87.6%)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되었다(국민권익위원회 2011). 국민권익위원회를 제외한 171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서는 총 4만4,029건의 공익침해사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3만7,733건이 처리되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이익(58.4%)과 공정경쟁(34.9%)분야의 공익침해신고가 많았고, 지방자치단체는 환경(41.8%)과 건강(34.4%)분야의 침해신고가 다수였고, 공직유관단체는 소비자이익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의 신고(100%) 이었다(국민권익위원회 2011). 실효성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적용을 위해 공익제보자의 보호 강화와 보상 수준을 높여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분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위생, 건설안전, 소비자 보호의 분야에서 증가적으로 민간부문의 공익신고 활성화가 반부패 정책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자의 책임기피, 도덕적 해이, 업무회피 등의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수단인 거버먼트 사회(government society)의 통제 역할의 강화와 외부통제 수단인 협력적 신뢰 네트워크인 거버넌스 사회(governance society)의 투명사회협약의 이행을 통해 정부, 기업, 시민부문의 반부패 정책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경제위기의 원인은 정경유착과 구조적인 공직부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1) 직무상 독립성이 없는 행정자치부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를 관장하는 것보다는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처럼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직무상 독립성이 있는 기관으로 감사원이 재산등록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2) 고지거부제도에 의해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가차명 금융계좌와 부동산 명의신탁 등에 대한 미흡한 통제장치로 인하여 고지거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과 “조세·건축·토목·식품위생·감사업무 등에 대해서는 5-7급”이 재산등록 대상”이고, 1급 고위직과 정무직은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데 최근 회계담당 공무원의 횡령 등의 부정·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회계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해 직급에 관계없이 전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다. 재산등록 대상자를 “직급별에서 직무별로 규정하는 방안”과 비리와 횡령 가능성이 큰 직무에 대해서는 재산등록 범위의 확대와 함께 “직무별로 제도를 차등화해 적용”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참여연대가 2011년 6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199명 중에 감사원과 대검찰청/법무부, 국가정보원 등의 27명을 제외한 172명의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 후 취업한 업체와 업무연관성을 분석하였는데, 대상 172명 중 103명(전체 대비 59.8%)이 부처 업무와 이해관계 있는 업체 등에 취업이 의심되며, 이 중 61명(전체 대비 35.4%)은 현행법 상 취업제한 대상인 부서 업무와 이해관계를 갖는 업체 등으로의 취업이 의심된다는 것이다(참여연대 2012). 참여연대는 2011년 10월에 저축은행 사태 시 공직자들의 연관 문제 해결책으로서 <전관예우 금지법>의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범위의 협소한 규정으로 인하여 공직자들이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있는 기업에 재취업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온정주의에 근거해서 퇴직 후 취업제한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제도개혁의 측면으로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을 구성하였지만,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수준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반부패기구라고 평가할 수 없다. 싱가포르(CPIB)와 홍콩(ICAC)등은 독립적 부패수사기구를 설립하였고,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은 독립적 부패수사기구가 없고 검찰과 감찰기관들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행정국가들에서 반부패통제기구를 설립하고 있다.

부패행위조사청(CPIB: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의 독립적인 반부패기구의 설립은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청렴국가로 인정받게 되는 평가에 결정적으로 기여

하였고, 우리나라도 수사권과 조사권의 권한을 부여받는 싱가포르의 독립성의 반부패통제기구의 설립이 요구되어 진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속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조사권을 부여받는 독립적인 기관의 설립은 반 부패기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임용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통제 전략의 제도적 방안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고비처) 설치와 고비처 설치의 찬성론의 견해들은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직의 비독립성, 종속,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및 기소 편의주의”의 반대, “검찰의 독주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별도의 수사기관의 필요”, 특검수사의 비 신뢰성 등의 관점을 지적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립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검찰 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별검사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별감찰관에 재산변동 내역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조사, 계좌추적, 통신거래내역 조회”등의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으로 하여금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하도록 한 후 범죄혐의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상설특검에 고발하여 수사하자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에게는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만 있다면, 고위공직자가 저지르는 “횡령, 배임,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범죄 행위를 효율적으로 수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임시특검은 일시적인 법률의 제정과 한시적인 법의 집행인 관계로, 특별검사가 임명되기 전에는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은 제도인 반면에, 상설특검은 특정범죄행위를 처리하는 일반적 법률의 제정과 상시적인 특별검사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특정범죄행위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검찰개혁을 통한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중립적인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V. 결론

한국의 CPI 측정을 위한 10개 기관의 자료들 중에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 4) 부패방지전담기구(과거 국가청렴위원회, 또는 부패방지위원회), 감사원, 검찰, 부패통제기관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등과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제1안으로는 부패방지기구에 조사권 등과 같은 사후통제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균형적인 부패통제전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만약 부패방지기구에 일반적인 조사권 등을 부여받지 못할 경우, 제2안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만이라도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두어 조사권과 기소권 등을 부여 받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부패방지기구는 반부패정책에 대한 총괄기구로의 사전예방적인 기능에 초점을 두고,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경우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사건을, 검찰이나 감사원에서는 고위공직자를 제외한 일반 부패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한국투명성기구, 2012:63).

PERC(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Asian Intelligence), PRS(Political Risk Services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WEF(World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의 3개 기관들의 자료들을 분석하였고, 나머지 7개 기관들의 평가들은 3개 기관들과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양호한 편이었다. PERC(47점), PRS(50점), WEF(48점)의 3개 기관들에 대한 자료 분석을 시행하였고 7개 기관들에 대한 분석이 부재한 것에 대한 연구의 한계로 지적 할 수 있다. 이 3개 기관들에서 지적되어진 낮은 평가를 받은 요소들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 선택적, 전략적인 행정통제의 역할을 통해 CPI 지수의 개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PERC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기업부패의 점수가 8.76점으로 아시아에서 2위였고, 부패 적발시,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는가를 묻는 설문에서는 8.87점으로 캄보디아(8.98)만 제외하면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PRS의 분석에서 한국은 정치 위험지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WEF의 분석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공적신뢰 112위,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 137위, 기업 협회의 효율성 130위, 소수 주주들의 이익의 보호 124위, 은행의 건전성 113위, 노동자-고용주 관계협력 132위의 평가로, 정부신뢰의 증가,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강화, 관료제와 노동시장의 효율성, 공정한 시장 경쟁 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외부적 제도적 통제전략은 국회, 사법부, 시민단체, 옴부즈만, 언론, 정당 등에 의한 행정통제의 사례이고, 내부적 제도적 통제전략은 대통령, 국무조정실, 감사원, 상급기관, 부처의 감사부서, 행정정보 공개, 민정수석 등을 통한 행정통제의 경우인데, 행정문화와 시민문화의 변화를 요구하는 장기적인 차원의 외부적·내부적인 행태적 통제전략보다는 외부적·내부적인 제도적 통제전략이 효과적인 전략으로 인식될 수 있다. 통제 전략의 우선순위의 분석에서 사고와 행태 변화를 통한 통제는 장시간이 요구되는 전반적인 의식과 태도에 대한 통제라는 관점에서 제도적 통제가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선진화된 사회에서는 외부적·제도적 통제가 효과적 이지만 우리나라의 발전행정의 전략에 근거해서 내부적·제도적 통제의 수단과 함께 단기간의 CPI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 수단과 정책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영중. (1993). 「부패학: 원인과 대책」. 서울: 숭실대학교.
- 감사원. (2013). 부패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 고려대 산학협력단. (2012). 「서울시 재정진단 용역 결과 보고서」.
- 부패방지위원회. (2001). 「부패방지백서」.
- 박중훈. (1999). 국민의 정부 반부패 개혁정책의 내용 및 평가. 「한국행정연구」, (4).
- 이만중. (2012). 공직부패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방안의 보완적 검토, 「경찰학 논총」, 7(1).
- 이승중. (2000). 행정통제. 한국행정학회 2002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중수·윤영진 외. (2005). 「새 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 이정주·윤은기. (2013). 우리나라 청렴도 수준파악에 관한 연구: 국가청렴도 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산정에 활용되는 원천 자료상의 설문문항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18(4).
- 윤동호. (201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의 정당성과 필요성, 「형사정책연구」, 22(1).
- 윤은기. (2012). 차기정부의 행정통제 전략을 통한 반부패정책의 제안, 한국행정학회 2012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윤은기. (2010). 싱가포르의 정치체제와 거버넌스, 「싱가포르의 행정과 공공정책」. 서울: 신조사.
- 윤은기. (2007). 부패방지를 위한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행정통제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2(4).
- 윤태범. (1998). 역대정부의 반부패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1).
- 한국투명성기구. (2012). 「2020 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 허전, 송석록. (2009). 헌법상 기관으로서 감사원의 독립성 제고방안. 「공법학연구」, 10(4).
- 전수일. (1996). 「관료부패론」. 서울: 선학사.
- 정우일. (1995). 「행정통제론」. 서울: 박영사.
- 참여연대. (2012).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보고서.
- Bayley, David H. (1966). The Effects of Corruption in a Developing Nation. *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XIX(December).
- Finer, Herman. (1941)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in Democratic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pp.335-338.
- Friedrich, Carl J. (1968). *Constitutional Government and Democracy*, Waltham Mass: Balisdell Publishing Co. pp.418-428.
- Frederickson, H. George. (1996). *The Spirit of Public Administr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Heidenheimer, Arnold J.(ed.). (1978). *Political Corruption: Readings in Comparative Analysis*. New York: Marcel Dekkar, Inc.
- Huntington, Samuel P. (1968).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Keefer, P., and St. Knack. (1995).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Cross-Country Tests Using Alternative Institutional Measures, *Economies and Politics*, Vol 7.
- Kligarrd, Robert. (1999). *Controlling Corruption*,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apalombara, Joseph.(ed.). (1963). *Bureaucracy and Political Development*.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eff, Nathaniel H. (1964).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Bureaucratic Corrup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VII(November).
- Mauro, Paolo. (1995). Corruption and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0, No 3.
- Nye, J.S. (1967).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A Cost-Benefit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LXII, No.2(June).
- Rose-Ackerman, Susan. (1997). The Political Economy of Corruption in Kimberly Ann Elliot, ed., *Corruption and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Institute for A Study in Political Economy.
-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2.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2: Full Source Description.
- The Global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 p.390; p392.
- <http://www.sgi-network.org>
- <http://cpi.transparency.org>
- <http://www.bti-project.org>

투고일자 : 2014. 02. 18

수정일자 : 2014. 03. 17

게재일자 : 2014. 03. 25

APPENDIX

Country/ Territory	CPI 2012 score	Surveyed Used	Scores range		Data sources													
			MIN	MAX	AFDB	BF (SGI)	BF (BTI)	IMD	ICRG	WB	WEF	WJP	EIU	GI	PERC	TI	FH	
Denmark	90	7	83	98		89		95	98		86	89	88	83				
Finland	90	7	83	100		89		90	100		91	87	88	83				
New Zealand	90	7	83	98		97		88	98		92	86	88	83				
Sweden	88	7	82	97		97		85	89		82	89	88	83				
Singapore	87	9	79	99			79	91	79		88	84	88	83	87	99		
Switzerland	86	6	73	90		89		90	89		85		88	73				
Australia	85	8	80	89		81		87	89		80	83	88	83	86			
Norway	85	7	78	89		81		78	89		85	88	88	83				
Canada	84	7	74	89		89		83	89		79	74	88	83				
Netherlands	84	7	73	89		73		86	89		84	87	88	83				
Iceland	82	6	71	98		89		80	98		81		71	73				
Luxembourg	80	6	71	89		81		81	89		86		71	73				
Germany	79	8	73	89		73		81	89		78	75	88	73		74		
Hong Kong	77	8	69	83				80	79		82	83	71	73	69	82		
Barbados	76	3	66	88							66		88	73				
Belgium	75	7	71	89		73		73	89		71	72	71	73				
Japan	74	9	57	79		57		78	79		79	78	71	73	78	73		
United Kingdom	74	8	69	81		73		76	69		81	73	71	73		77		
United States	73	9	50	89		89	75	77	69		64	69	88	73	76	50		
Chile	72	9	63	82		65	79	82	79		73	67	71	73		63		
Uruguay	72	6	69	79					69		69	71	71	73				
Bahamas	71	3	69	73					69				71	73				
France	71	8	57	79		57		73	79		67	74	71	73		77		
Saint Lucia	71	3	70	73						70			71	73				
Austria	69	8	59	79		73		59	79		63	71	71	63		74		
Ireland	69	6	54	78		65		76	69		78		54	73				
Qatar	68	6	49	89			49	77	50		89		71	73				
United Arab Emirates	68	7	54	86			58	75	60		86	68	54	73				
Cyprus	66	4	62	71					69		62		71	63				
Botswana	65	7	60	72	62		66		60		60	72	71	63				
Spain	65	7	52	73		65		58	69		52	73	71	63				
Estonia	64	8	50	75			75	70	50		64	71	54	63				
Bhutan	63	3	58	70			58			70			63			68		
Portugal	63	7	54	73		65		58	69		59	61	54	73				
Puerto Rico	63	3	54	71							54		71	63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62	3	54	73						58			54	73				
Slovenia	61	8	45	73			71	45	50		54	55	71	73		68		
Taiwan	61	7	50	79			79	66	50		64		54	63	50			
Cape Verde	60	4	52	70	62					70	57		52					
Israel	60	5	52	68				64	60		68		54	52				
Dominica	58	3	54	63						58			54	63				
Poland	58	10	47	65		65	62	47	50		55	65	54	63		63	58	
Malta	57	4	52	63					60		52		54	63				
Mauritius	57	5	52	71	55		53				55		71	52				
Korea(South)	56	10	47	67		57	66	55	50		48	67	54	52	47	66		
Brunei	55	3	41	72					41		72		52					
Hungary	55	10	37	71		49	62	37	50		40	65	71	63		57	55	
Costa Rica	54	5	31	71			66		31		51		71	52				
Lithuania	54	7	31	71			66	45	31				63			55		
Rwanda	53	5	40	77	47		40						52					
Georgia	52	6	32	70			49						52			44		
Seychelles	52	4	32	71	32													
Bahrain	51	5	36	61			36		50		61		54	52				

국문초록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개선방안을 위한 탐색적 연구 -PERC, PRS, WEF의 부패지수 자료를 중심으로-

윤은기(동아대)

국제 투명성 기구는 2013년에 13개 원천자료들에 근거해서 부패인식도(CPI)에 대한 국가들의 순위를 평가하고 있다. CPI의 측정 자료인 13개 자료들은 AFDB, BF(SGI), BF(BTI), FH, TI, WB, WJP, WEF, EIU, GI, IMD, PERC, PRS등이 포함되는데 CPI의 순위와 각 자료들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을 측정하는 CPI 원천자료로는 BF(SGI), BF(BTI), TI, WJP, WEF, EIU, GI, IMD, PERC, PRS 등이 포함되고 있는데, 10개 기관 중에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은 정치·경제 리스크 컨설팅사(PERC-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Asian Intelligence), 정치 위기분석기관의 국제국가위험지수(PRS-Political Risk Services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세계경쟁력보고서(WEF-World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등이 포함된다. 이 기관들에 의해 지적되어진 낮은 평가를 받은 요소들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 선택적, 전략적인 행정 통제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 CPI 지수의 개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CPI의 부패 지수를 개선시키기 위해 내부적·제도적 행정 통제의 수단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 PERC, PRS, WEF, 행정통제

